

요약

자유학기제 활성화는 지역사회 역할이 '핵심' 서울시, 지원조례 제정해 안정 운영기반 마련

자유학기 활동은 학생의 다양한 꿈끼 탐색 가능 '지역 역할 중요'

현 정부 주요 교육정책인 자유학기제는 시범실시를 거쳐 2016년 모든 중학교로 전면 확대되었다. 자유학기제는 학교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한 제도로 '교과 수업 혁신'과 '자유학기 활동'으로 운영된다. 이 중 자유학기 활동은 학생들이 다양한 꿈과 끼를 탐색할 수 있는 활동으로 학교 밖 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특히 자유학기 활동 중 진로탐색 활동은 다양한 진로탐색과 체험을 요한다는 점에서 지역 자원과의 연계가 필수적이다.

교육부는 자유학기제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와 진로교육법 제정 등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다양한 공공·민간 주체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그러나 제도에 대한 사회적 공감과 준비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되면서 지역사회에서 어려움이 수반되고 있다. 지역사회와 연계·협력이 이루어질 때 자유학기 활동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으므로 지역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자유학기제, 서울시교육청은 선도적 추진... 서울시는 준비·지원 미흡

서울시교육청은 국정과제 채택 이전인 2013년에 '중학교 1학년 진로탐색 집중학년제'를 도입·추진하면서 자유학기제 운영 모델을 먼저 제안하였다. 중학교 1학년 1·2학기, 2학년 1학기 중 한 학기를 자유학기로 운영하는 교육부의 지침에서 나아가 서울시교육청은 탐색·연계학과와 집중학기(2학기)를 운영하는 '서울형 자유학기제'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중 2 혁신 자유학년제를 비롯하여 고교 자유학년제인 '오디세이학교'를 시범운영하는 등 자유학기제 착근을 위한 자유학기제 운영 모델을 선제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서울시는 주로 서울시 기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정보를 수집하여 제공하거나, 산하기관 및 청소년수련시설의 프로그램 운영사업을

지원하는 등 자유학기제 지원에 다소 소극적이다. 중학교 1학년 학생 수를 감안하면 지원사업과 관련 예산은 매우 적어 준비와 지원이 미흡하다.

자유학기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주체의 참여가 절실하나 민간보다 공공의 참여와 준비가 우선되어야 한다. 서울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자유학기제 준비와 대응 실태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면담과 FGI로 자유학기 연계 과정에서 겪는 현실적인 문제 등 의견을 수렴하였다.

49개 공공기관, 273개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年 17만여명 이용'

서울시 공공기관 설문조사 결과, 105개 응답기관 중 65개 기관이 청소년 대상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다.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청소년시설은 100%가 운영하고 있으며, 산하기관 및 투자·출연기관은 42.9%만이 운영하고 있다.

자유학기 활동 중 진로체험 프로그램은 49개 기관에서 273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1년에 177,652명이 이용하고 있어 많은 학생이 참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273개 프로그램 중 216개의 프로그램은 진로직업체험센터에서 운영되고 있어 다른 기관에서의 운영 실태는 저조한 것으로 보여, 적극적인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다.

[표 1] 기관별 진로체험 프로그램 유형 현황

(단위: 개, %)

구분	산하기관 및 투자·출연기관	진로직업체험센터·청소년수련시설	도서관	계
현장직업체험형	6(35.3)	27(12.5)	14(35.0)	47(17.2)
직업실무체험형	1(5.9)	56(25.9)	0(0.0)	57(20.9)
현장견학형	3(17.6)	3(1.4)	3(7.5)	9(3.3)
학교체험형	1(5.9)	13(6.0)	0(0.0)	14(5.1)
진로캠프형	1(5.9)	36(16.7)	2(5.0)	39(14.3)
강연형·대화형	5(29.4)	47(21.8)	20(50.0)	72(26.4)
기타	0(0.0)	34(15.7)	1(2.5)	35(12.8)
계	17(100.0)	216(100.0)	40(100.0)	273(100.0)

공공기관, 자유학기제 관심 높지만 기관별 편차 크고 실질지원 부족

공공기관의 자유학기제 준비 정도에서는 기관장의 관심(69.5%), 자유학기제 관련 회의 개최(67.6%)는 다소 높게 조사되었다. 그러나 예산 배정(41.0%), 상시인력 지원(44.8%)은 과반이 되지 않았다.

기관유형별로 자유학기제 준비정도를 살펴보면, 대체로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청소년수련시설은 높은 반면 도서관, 서울시 산하기관 및 투자·출연기관 순으로 준비 정도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산하기관 및 투자·출연기관에서도 기관장의 자유학기제에 대한 관심(48.6%)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그러나 기관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40.0%), 자유학기제 관련 회의나 논의 실시(37.1%), 관련 네트워크 참여(25.7%), 연간 계획 수립(22.9%), 예산 배정(20.0%), 상시인력 존재(20.0%), 보조인력 존재(11.4%), 온라인정보시스템 활용(11.4%) 순으로 실질적인 지원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의 운영 현황을 조사한 결과, 기관당 관련 예산은 평균 21,532천 원, 강의실은 평균 4개 실, 상시인력은 평균 2.2명이었다. 서울시 공공기관은 자유학기제 준비와 실제 운영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연계·협력 활발... 예산 부족·적합한 프로그램 부재 등의 문제점

서울시 공공기관의 57.1%가 학교와 연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보았으며, 2015년에는 연간 평균 57.8회, 2016년 상반기에는 17.8회 협력한 경험이 있어, 학교와의 협력은 활발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 연계 협력 방법으로는 ‘해당학교에 직접 전화로 연락’(38.7%) >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를 통해’(22.6%) > ‘교육청 공문과 안내’(14.5%) > ‘직접 홍보 및 안내’(12.9%) 순으로 나타나, 직접 연락하는 방법이 선호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연계 경험이 있는 기관의 연계 이유로 ‘정부 추진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서’(25.5%) > ‘학생 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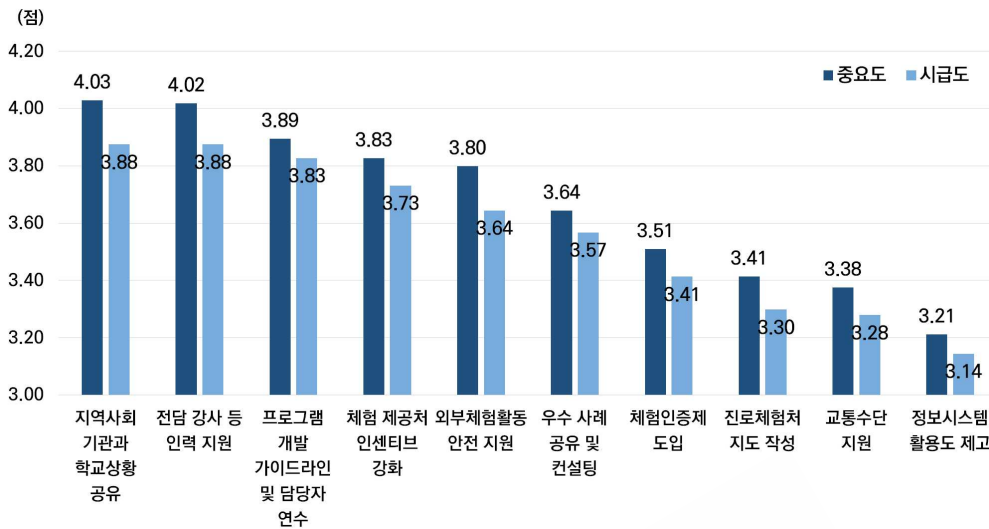
상으로 기관 안내 및 홍보가 가능하여'(22.5%) 순으로 공공기관이 자유학기제에 대해 알고 있으며, 정부 정책에 보조를 맞추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계 미실시 이유로는 '적합한 프로그램의 부재'(14.9%) > '전담 인력이 없거나 부족'(14.9%) > '기관 성격상 불필요해서'(12.8%) > '자유학기제를 몰라서'(10.6%) 순으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공공기관 담당자들은 자유학기제 연계 개선사항으로 '예산 확대'(34.4%), '기관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 개발'(24.6%), '학생 수준을 고려한 프로그램 운영'(14.8%) 순으로 답하였다. 기관 유형별로는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청소년수련시설, 도서관은 모두 '예산 확대'를 가장 우선 사항으로 인식한 반면, 서울시 산하기관 및 투자·출연기관은 '기관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 및 업그레이드'를 우선해야 한다고 보았다.

활성화 중요도·시급도는 학교·지역기관 간 상황공유, 인력지원 등 순

자유학기제 활성화 관련 중요도와 시급도는 전체적으로 '지역사회 기관과 학교 상황 공유'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중요도 평균 4.03점, 시급도 평균 3.88점). 이어 '전담 강사 등 인력 지원'(중요도 4.02점, 시급도 3.88점), '프로그램 개발 가이드라인 제시 및 담당자 연수'(중요도 3.89점, 3.83점) 순으로 높았다.

기관유형별로는 산하기관 및 투자·출연기관은 인력 지원이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방안으로 본 반면,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청소년수련시설과 도서관은 학교 상황에 대한 지역사회 기관과의 공유가 가장 우선이라고 답하였다.



[그림 1] 자유학기제 활성화 의견(중요도와 시급도)

사례분석 결과 “핵심키는 진로직업체험센터 중심 학교·지역기관 연계”

서대문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의 사례분석 결과, 활성화될 수 있었던 이유는 서대문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가 주축이 되어 지역사회 기관과 학교와의 연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또한 청소년수련시설에 위탁되어 기존 시설 등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었으며, 지역 네트워크가 잘 운영되었기 때문이었다.

진로상담교사 간담회는 현장체험 및 직업실무체험 시 학교 간 일정을 조율하였다. 지역 내 진로체험박람회 개최에서 사전 예약 부스를 선정하고, 개최 당일 많은 인원이 몰리지 않게 협의하는 등의 역할을 하였다.

학교·지역기관 최초 연계 시 중간조직인 진로직업체험센터 주로 활용

면담조사 결과, 자유학기제 시행 초기에는 학교와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모두 직접 현장을 다니면서 체험처를 발굴하였으나, 최근 들어 협의회 등 다양한 사업 내 네트워킹이나 지역자원 지도 등 매체를 활용하여 체험처를 발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학교 이외 센터, 기관(개인)은 교육부에서 운영 중인 온라인 정보시스템인 “꿈길”을 알지 못하거나 그 활용이 저조하였다.

학교나 지역 기관 모두 직접 찾아 연계하는 일은 버거운 일이기 때문에 최초 연계 시에는 다양한 일터를 보유하고 필요에 맞게 매칭해줄 수 있는 중간 조직인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를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계방식으로는 주로 공문, 유선, 메일 등 간접적인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학교, 진로직업체험 시 비용↓·거리↓·안전↑·프로그램 질↑ 기관 선호

학교에서 자유학기제 연계를 촉진하는 환경으로는 다양한 요인이 존재하지만, 비용이 없거나 적게 들면서 위치가 가깝고 안전과 프로그램 질이 담보된 기관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학기제 예산으로 단위학교는 학생 수에 따라 차등 지원되나 평균적으로 2천만 원을 지원받는데, 학교 내 강사 인건비, 교과 개선 관련 교사 연수 등에 소요되어 실질적으로 현장체험 시 가용금액은 매우 적다고 면담한 교사들은 토로했다. 그렇기에 학교에서는 체험 비용이 없거나 소액 재료비 정도를 학생이 본인 부담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자유학기 활동 대부분은 중간고사 기간에 하루(1일)나 오후시간대를 활용하여 실시하기 때문에 거리상 제약이 있었다. 또한 학교와의 거리는 비용과 안전이 직결된 문제이고, 최근 마을 교육공동체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져 지역 내에서 연계하려는 움직임이 큰 것으로 보였다.

프로그램 질과 관련해서 체험 대비 효과가 크길 바라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학교 입장에서 민간 체험처의 프로그램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직접 체험하지 않고서 알기 어렵고, 대체로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공공기관이나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청소년수련시설의 자체 프로그램 이용을 선호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프로그램은 한정적인 반면 학사일정은 비슷하여 연초 학교마다 질 좋은 프로그램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였다.

참여확대 난망, 지속가능성 곤란, 전문성 부족 등이 활성화 제약요인

현장에서 드는 자유학기 활동 활성화 제약 요인은 크게 제도·정책적인 부문과 운용·실행적인 부문으로 구분된다. 제도·정책적 제약으로는 자유학기제 자체가 진로체험처 기관의 자발성에 의존하는 구조여서 참여를 확대하기 어렵다는 점과 기관장 또는 담당자가 의지를 가지고 진행하지 않으면 사실상 형식적 운영으로 그칠 수 있어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또한 자유학기제가 현 정권 이후 계속되어 추진될 것인가에 대한 불신도 있었다.

운용·실행적인 제약으로는 여러 참여주체 간 역할 분담이 모호하여 그 과정에서 서로에 대한 불만이나 회의감 등이 발생한다는 점과 진로체험처에서 프로그램 개발에 투입할 인력이 없거나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점이었다. 이 외에도 양질의 현장 체험을 담보하기 어렵거나 다양한 직업군을 발굴해야 하나 실제 체험이 가능한 직업군은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었다. 또한 정부는 자유학기제 활성화를 독려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동인 없이 교육기부만으로는 민간 참여를 넓히기 어렵다는 문제제기가 많았다.

학생·체험처 제공 담당자 “자유학기 활동이 진로탐색에 의미” 공감

자유학기 활동이 학생만이 아니라 체험처 담당자에게도 의미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학생은 진로직업 탐색활동을 하면서 흥미를 발견하거나 새로운 경험을 넘어서 미래 직업에 대한 진지한 탐색을 하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 참여자, 특히,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자신의 일터를 학생들의 진로직업체험 장소로 제공하면서 학생들의 변화를 옆에서 지켜봄으로써 자부심을 가지게 된다는 점은 주목해 볼 점이다.

의미를 공감하는 관계자들은 자유학기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체험 기회 확대’, ‘학교 내 자유학기제 연계 활동 강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장려’, ‘지원체계 간 실질적인 협업을 위한 정보 공유 및 유기적인 협력’, ‘진로직업체험센터의 거점 역할 강화’, ‘다양한 예산 확보 방안 강구’ 등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 설문조사 결과와 대체로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도 자유학기제 지역사회 착근 위해 적극 지원대책 마련 필요

대체로 교육부, 교육청에서 권한을 가지고 수행해야 할 업무라서 서울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제한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의 다양한 꿈과 끼를 탐색하고 전인적 성장을 돕는 일은 교육청만의 업무는 아니며, 공동의 역할이자 지역사회가 함께 해야 할 때 성취도를 높일 수 있다. 따라서 서울시는 보조적 지원에서 탈피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지역에서 진로탐색 활동 중심의 자유학기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진로직업체험지원 허브센터 지정 및 권역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지정 등의 진로체험 지원체계를 강화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서울시는 ‘(가칭)서울시 청소년 진로체험활동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조례 제정으로 지원체제 구축 및 안정적인 예산 확보와 지원 인력의 마련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진로체험처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담당자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하여 전문성을 높여가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서울시 기관에 대해서 기관 평가지표에 진로체험처 제공여부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의 질을 위한 체험처 관리와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해 나가야 할 것이다.